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22/31℃ 목포 22/29℃ 여수 23/28℃

단기 4342년 (음력 7월 9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458호 1판 2009년 8월 28일 금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나주 혁신도시 광역철도 노선

상무~혁신도시~나주역 가장 적합

용역 중간보고…총연장 27.6㎞ 경전철로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무역~서광주역~혁신도시~나주역 노선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광주시가 개최한 광주~나주 혁신도시 간 광역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용역에 따르면 광주-공동혁신도시를 연결하는 3개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상무역~서광주역~남평대교~전남농기원~혁신도시-나주역(1안)을 잇는 총 연장 27.6㎞ 구간이 타당성이 가장 높았다.

광역철도 노선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상에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레일을 놓는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으로 가설된다.

이 구간은 광주시의 장기 도시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승객 수요, 사업비 절감 등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노선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노선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향후 건설될 2호선과도 환승이 가능해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서부농수산물시장~남평대교~지방도 819호선을 연결하는 10.3㎞ 기존도로에 경전철을 건설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선 전체 건설 비용이 1조 4천여억원이 드는 등 사업비 확보가 과제로 꼽혔다.

2안으로 검토된 송정역~나주시 산포면~지방도 25호선~공동혁신도시~나주역을 잇는 총 연장 22.4㎞ 구간은 영산강 하천에 교각 4개를 건설함으로써 사업비가 늘어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 광주~나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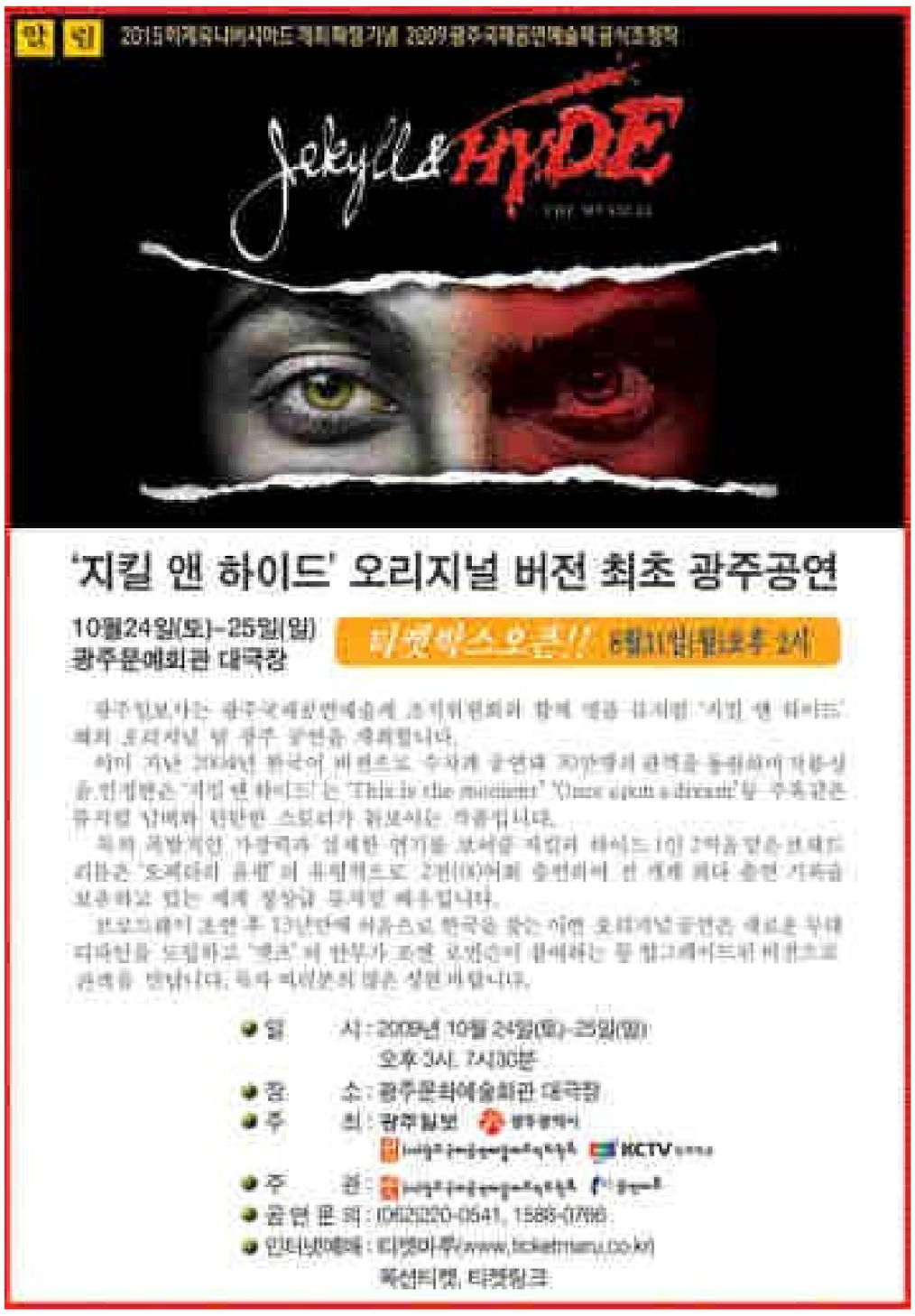
3안인 송정역~호남선~동신대학교~나주역~영산강 하천 통과-공동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24.7㎞ 구간(정거장 8개소)은 승객 수요가 적어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는 광역철도는 국비 75%, 지방비 25%로 건설되며,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사업 추진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시철도정책연구회, 전남도, 나주시, 공동혁신도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비 등 광역철도 건설계획안을 마련,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공동혁신도시 간 광역철도 사업은 광주, 혁신도시, 나주 권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다"며 "광역철도 건설이 5+2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종플루 국내 세번째 사망자 발생

폐렴 증세 입원 노인 서울서 치료 받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이 본격화된 가운데 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2·5·6면〉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 24일 폐렴증세로 입원한 노인이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증세가 악화돼 숨졌다"고 27일 밝혔다.

이 노인은 한달전부터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났으나 병세가 나빠져 최근에야 병원을 찾았고 역학조사 결과 인플루엔자 A(H1N1)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현재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급파, 자세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3번째 사망자가 나온 것은 지난 15, 16일 신종플루 첫째, 둘째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11일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종플루가 본격적인 유행기에 접어들면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본부가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등이 참가하는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9월 국회 전격 등원 결정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7일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무조건 등원을 전격 선언했다. 〈관련기사 4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위한 의사일정 협상에 들어갔으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의 원천 무효를 요구하는 한편 원내외 병행투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해결하자"

남측, 적십자회담서 제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8·26~28 금강산)에서 남측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추진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향후 논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27일 금강산에서 열린 이틀째 회의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하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 협의키로 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서에 넣자고 북에 제안했다.

회담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형식'을 제의했다고만 소개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수 이산가족'의 범주로 묶어 이산상봉 행사때 전체 상봉인원의 10% 가량을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에 할당하는 종전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은 "추석 상봉행사만 논의하자"며 구체적인 논의 자체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